

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

<목 차>

과태료 부과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이영평
	담당부서 (과)	금융제도팀		직급	5급
	국장	도규상		연락처	02-2100-2842
	과장	홍성기		이 메 일	ypyunglee@korea.kr

금융정책국장

도규상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과태료 부과기준				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, 별표8	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제3항															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'17.5.23.~7.3.	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	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고,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에 차등을 최소화							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 수렴방식</th><th>의견 내용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</td><td>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</td><td>-</td><td>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피규제자	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	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														
	피규제자	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	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	-	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	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
		해당 없음		해당 없음	해당 없음													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을 생략																		
기타	12.일 몰 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									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행

개정안

[별표 8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 대상	금액
가.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 제1항 제1호	기관	1,500
		개인	1,500
<신 설>			
나.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	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2	기관	3,000
		개인	1,500
다. 법 제8조의5제3항(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10조의2제2항,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	법 제72조 제1항 제3호	기관	3,000
		개인	1,500

[별표 8]

1.

감면

2.

<

거. 법 제51조의2의	법 제72조	기관	5,000
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제1항 제7호	개인	2,500
너. 법 제54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 성한 경우	법 제72조 제2항 제2호	기관	500
더. 법 제55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고 를 하지 않거나 허 위로 공고한 경우	법 제72조 제2항 제3호	기관	500
러. 법 제56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시 를 하지 않거나 허 위로 공시한 경우	법 제72조 제2항 제4호	기관	500
머. 장부·서류의 은닉, 부실한 신고 기타 의 방법에 의하여 법에 의한 검사(법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) 를 기피 또는 방해 한 경우	법 제72조 제2항 제5호	기관	1,000
		개인	500
버.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· 제출·보고·공고 또 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	법 제72조 제2항 제6호	개인	200
서.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의한 규정·명령 또는 지 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 제1항 제8호	기관	1,000
어. 법 또는 법에 의 한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	법 제72조 제2항 제7호	기관	200
		개인	100

		자	
<삭 제>			
너. -----를 ----- ----- ----- -----	제1항 제8호	법인 인 자	6,000
더. -----를 ----- ----- ----- -----	제1항 제9호	법인 인 자	6,000
러. -----를 ----- ----- ----- -----	제1항 제 10 호	법인 인 자	6,000
머. ----- ----- 신고, 그 밖 의 방법에 따라 법 에 따른 검사를 거 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	제1항 제 11 호	법인 인 자 법인 이 아닌 자	10,000 5,000 다만, 임직 원의 경우 에는 2,000 만원 으로 한다.
버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법인 이 아닌 자	-----
서. ----- ----- ----- -----	제1항 제 12 호	법인 인 자	2,000
어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	법인 인 자 법인	400 200

우(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)				----- -----		이 아 닌 자	
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	--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(추진배경)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*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

* 법인 5천만원 → 1억원, 개인 1천만 → 2천만원

- ☐ (정부개입 필요성)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(대안의 내용) 법 개정('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2배 인상(법인 1·5천만원 → 1억원, 개인 1천만원 → 2천만원)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*

-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의 차등을 최소화**하여 제재의 형평 제고

* 원칙 : 법인 1억원, 임직원 2천만원, 임직원 외 대주주 등 개인 5천만원

**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%, 60%, 30%, 20% 등 금액으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적용

(예시)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0%, 업무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60% 등

<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안 >

(단위: 천만원)

위반의 중요도	부과 사유	법상 한도 ¹⁾	부과대 상 ²⁾	현 행	개 정	
100%	한도초과주식 처분명령 위반	10	법인	3	10	
	개인		1.5	5		
	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등		법인	5	10	
	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의무 위반		법인	5	10	
			개인	2.5	2 임원	
	검사 거부·방해 또는 기피		법인	5	10	
			개인	2.5	5 임직원 2	
60%	유사상호 사용 금지의무 위반		법인	3	6	
	개인		1.5	3		
	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위반		법인	1.5	6	
	주식보유한도,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, 신용공여한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불응		법인	3	6	
			개인	1.5	3	
	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금융위에 보고 또는 공시의무 위반		법인	3	6	
	비은행지주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사전 보고의무 위반		법인	3	6	
	업무보고서 미제출, 허위 작성	법인	0.5	6		
	재무제표 미공고, 허위 공고	법인	0.5	6		
	경영공시 미공시, 허위 공시	법인	0.5	6		
30%	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등 사후 보고의무 위반	법인	1.5	3		
		개인	1.5	1.5		
10·20%	금융지주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·명령·지시 위반	2	법인	1	2	
	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서류 비치·제출·보고·공고·공시 태만		개인	0.2	0.2	
			금융지주회사 외의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·명령·지시 위반	법인	0.2	0.4
				개인	0.1	0.2

1) '17.10월 시행 예정인 금융지주회사법 기준 / 2) 개인은 '법인이 아닌 자'를 의미

□ (선택 근거)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‘15.9월)*의 일환

* 금융지주회사법 개정(‘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

○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
○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
□ 한편,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

○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

○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중

3. 기대 효과

☐ “숨방망이 금전제재”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

- 대형 금융사고·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“숨방망이 제재”라는 비난이 많았음

⇒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금전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

☐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·금액의 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

-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업권간 제재 유형이나 수준이 다른 문제

⇒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업권별 제재 형평성을 제고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☐ (규제목적)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, 금융회사의 신뢰성,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

☐ (규제수단)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☐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□ 영국·미국 : 영국은 Financial Penalty,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·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

○ 우리나라는 과태료·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·부과요건·부과 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,

○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“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”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

-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*

*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“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”으로 규정

-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*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

* 위반행위 1일당 (1단계) \$7,500 / (2단계) \$37,500 / (3단계) \$1,425,000

-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 제재를 부과해 옴

· '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(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)가 \$1억(1천억원), OCC가 \$3.5천만(3.5백억원), LA City가 \$5천만(5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- '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\$2억(2천억원), FRB가 \$2억(2천억원), OCC가 \$3억(3천억원)의 민사제재금을, 영국 금융당국은 £1.4억(2천억원)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- '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\$5천만(5백억원)의 약 2배에 가까운 \$9천만(9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□ 독일 · 일본 :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
- 독일은 과태료 ·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, 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(최대 100만유로)
-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 · 과징금*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(최대 30억원)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

*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

○ 타법사례

□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

-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
 - 공정거래법은 허위 공시,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*
 - * 조사 거부 · 방해 · 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 - 반면, 금융지주회사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

□ 금융법 사례 분석

- 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*

* '15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3.6억원(건당 12백만원), 개인 29.2억원(건당 5백만원)
'16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5.6억원(건당 16백만원), 개인 24.5억원(건당 6백만원)

- ⇒ 법인인 자 최대 1억원, 법인이 아닌 자(임직원 등) 최대 5천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*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

*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여전·저축은행·신탁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- ②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업권간 제재 형평을 제고

- (예시) 경영공시의무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타 금융법에 비해 기준금액이 낮으므로 동일 수준으로 형평을 제고하되, 경영 투명성 등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상향

구 분	현 행	개정안
금융지주법 시행령	과태료 5백만원	과태료 6천만원
은행법 시행령	-	
자본시장법 시행령	과태료 1천만원	
보험업법 시행령	과태료 3.5천만원	
여전법 시행령	1.5천만원(미공시) 5천만원(허위공시)	과태료 3천만원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 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☐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15.9월)의 일환

-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,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☐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

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☐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

- 또한,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☐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’15.9월)의 후속조치임
-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(’15.12월, ’16.10월)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(심층인터뷰 등)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·수렴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금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강화하는 「제재개혁」 정책의 일환으로
-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